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 사 청 문 부 적 격 보 고 서

2023. 8.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주 위원 일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23년 8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주 위원 일동

1. 인사청문대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2. 회부 및 청문 일자

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2023. 8. 01.(화)

나.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 2023. 8. 02.(수)

다. 실시계획서 채택 : 2023. 8. 10.(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라. 청 문 : 2023. 8. 18.(금)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23. 8. 24.(목)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주 위원 일동

보고서 송부

3. 인사청문경과

가. 실시경위

- 2023년 8월 1일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10일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8월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주 위원 일동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송부함.

나. 종합의견

□ 지난 18일에 진행된 청문회는 이동관 후보자가 공정성과 독립성, 도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수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사실만 확인한 청문회였다고 판단됨.

후보자는 그간 불거진 학폭, 언론장악 의혹 등과 관련해 '발뺌'과 '부인' 등 모르쇠로 일관했고, 의혹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는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부분의 자료를 미제출하며 국회 검증 과정을 무력화시켰음.

심지어 청문회에서 거짓·위증까지 하는가 하면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로 답변하여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주 위원 일동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및 준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부적격 의견을 모았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는 당선인 특별고문,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보로 일하는 등 현 정부와 매우 유착 관계에 있음. 따라서 이러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함.

또한 「방통위법」 제10조(결격사유)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될 수 없음.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펴볼 때 당선인 특별 고문직을 수행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적합하지 않음.

2015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당시 「방통위법」 수정의결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임을 밝히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특보 및 특별고문 등이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후보자의 경력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임명을 지연·거부하고 있는 선례로 비교해 볼 때, 이동관 후보자 역시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음)

○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행위 무마 의혹

- 후보자의 아들은 2011년 하나고 1학년 때, 폭행과 괴롭힘,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행하였으나 정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일반 전학을 간 사실이 있음.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문(6월 8일)을 통해 심각한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며, 공개된 학교폭력 진술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자신의 자녀가 전학을 간 경위는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이었으며,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당시 ‘학교폭력사안 대응 기본지침’에 따라 담임교사 종결처리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존재 여부를 비롯해 후보자 주장의 사실 여부,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하여 부당한 외압이 없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후보자 주장의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왜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첫째, 학교폭력 존재 여부에 대하여 처음엔 사실이 아니라고 부

정했다가 나중에 일부 있었다고 인정하였음. 그럼에도 공식적인 제재 조치에 다른 징계성 전학 조치가 된 것이 아니라, 권고 전학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특혜성 전학을 인정한 것임.

- 둘째, 진술서에 따르면 후보자 자녀는 1학년인 2011년 3월과 4월경부터 피해 학생들에게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 돈을 쓰게 만드는 등 폭행, 괴롭힘, 갈취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음. 후보자는 해당 진술서는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진술서는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정식 진술서로 다루어졌고, 청문회 직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2012년 당시 하나고 교사의 증언을 통해서도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되었음.

또한 후보자는 입장문과 서면답변을 통해 자녀의 학폭 사안은 1학년(1학기) 때 이미 화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교사들의 증언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진술서가 작성될 2012년 당시 학폭 합의, 화해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음. 또한, 후보자가 화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 4명 중 1명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해 학생 전원이 화해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셋째,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학기 중에 전학을 갔다는 후보자의 해명에 대하여, 하나고가 당시 후보자 자녀의 학폭과 관련하여서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여 후보자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되었음. 그동안 하나고 선도위원회, 학폭위 개최 내역을 보면 그저 찜찜했다는 사유만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개최된 내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동관 후보자 자녀의 경우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이 명백해졌음.
- 넷째,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이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에 의해 담임 종결 처리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당시 지침에 따르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학폭위는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아들의 사안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정해놓고 있었음.

종합하면 2015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와 당사 하나고 교사 여러 명의 증언으로 후보자 자녀의 심각한 학교폭력이 존재하였고, 진술서 내용의 진위가 확인되었으나 후보자는 계속해서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등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답변하였음. 반면에 학폭 발생 10년이 지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 1인의 진술은 공식적 진술이 아님에도 금과옥조처럼 진실을 강조하는 모순을 보여 주

었음. 또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서 외압성 전화를 걸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전학을 갔으며,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까지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이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예상되는 불이익을 회피하여 입시에서의 공정성마저 훼손하였음.

○ 후보자가 자행한 언론 장악 · 통제 행위 은닉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된 여러 문건이 후보자가 언론 장악과 통제, 검열을 지시했음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후보자는 줄곧 모르쇠로 일관하며 은닉하기에만 급급함.

- 이동관 후보자가 홍보수석 재직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김철균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는 이 역시 모른다고 답변하였음. 공소장에는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의 내용을 활용하여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배포하였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후보자는 홍보수석실이 자행한 언론 개입, 여론조작 등에 대하여 몰랐다고 답변하는 등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

였음.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언론장악 전력이 들통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기본적 자격과 자질이 전혀 없는 인물임이 확인되는 것이며, 정말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홍보수석으로서 조직을 통할 관리를 하지 못한 무능력자였다는 증거로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를 이끌어갈 공직자로서 능력과 자질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우호적인 언론 관리와 문제 보도라는 형태 하에 당시 조선일보를 관리한 사실에 관한 질문에서 후보자는 “좌우간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건 저는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방송편성을 바꾸도록 압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함. 하지만 <YTN 보도 리스트> 문건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 내용에 대해 ‘앵커멘트를 순화’시키거나 ‘보도 자제’, ‘비보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남. 이처럼 보도 내용이나 보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보도 통제이며 강제적 방송편성 개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특히 후보자는 ‘전화 격려 리스트’에 있는 언론인과 대통령의 격려 통화와 관련해서, “문건 나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직접 격려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뀌드린 적은 몇 번 있다”

라고 답변함. 이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이나 아니냐 여부에 따라 언론의 정권 줄 세우기를 획책하는 반민주적 처사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이명박 정권 시절 저질렀던 언론 검열과 통제, 언론의 줄 세우기 소신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국민 앞에 스스로 공증해 준 것이라 할 것임.

-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을 동원하여 언론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민간인까지 불법사찰, 여론조작 등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여 정치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등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

당시 국정원 사이버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에 대하여 청와대 파견관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요청하였다”라는 진술이 있고, 이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가운데 ‘명진의 부도덕성·좌편향 폭로 확산 심리전 전개’ 문건을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시사항임이 드러나 있음.

국정원을 동원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들이 즐비하고, 검찰의 수사에서도 명백한 진술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오로지 모르쇠로만 일관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 주었음

결국 과거에 후보자 스스로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청문회 자리에서 마저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고 국정원에 지시한 적 없다”라며 거짓말로 일관한 이동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확인됨.

- 후보자는 2008년 당시 후보자 부인의 농지법 위반 기사를 보도하려고 한 국민일보의 편집국장과 취재기자에게 전화해 보도를 방해한 바 있음. 후보자는 지인 관계인 편집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였으나 외압이 아니라고 주장함. 기껏 답변한다는 것이 “친구끼리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얼버무리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음. 당시 취재기자에게도 전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며 부적절한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막으려고 언론사에 전화한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수석이 「방송법」 제4조 제2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참고할 때, 후보자는 신문법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1항과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따라서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을 통제했던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심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 국정원을 사주하여 만들어진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서는 그간 "본적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청문회에서는 말이 바뀌었음. 오전 청문회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하더니, 청문위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오후 청문회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처음에 한두 번 가져오길래 제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말을 번복함. 이는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한 것임.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하여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서는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드러내, 언론 자유와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준 것임.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상의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언론장악 문건의 지시자로 '홍보수석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홍보수석실을 이끌었던 후보자 본인은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함.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를

보면, 국정원 직원들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작성했다", "청와대 각 수석실 등 요청부서에서 제목 및 기한을 지정해 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면,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동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정말 몰랐다면 리더쉽의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임.

- 또한, YTN과 조선일보 등 언론사의 '문제 보도'를 관리, 국가정보원에 언론 장악 문건 작성을 요청과 실행에 대해,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은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책무로, 직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 후보자가 언론 장악 · 통제, 관리를 기본 책무로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전면 부인하는 심각한 언론관의 소유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인물임이 확인해 주는 것임.

- 이러한 태도들을 종합해 볼 때, 후보자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할 자격과 자질이 원초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처음부터 후보자로 지명되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였음을 알 수 있음.

○ 부적합한 언론관

-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활동 및 현 사장 거취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인사 개입 의도 등을 내비쳤으며, “(한국방송 등의)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하겠다.”라고 답변하여 여전히 이명박 정부 재직 시절 보여왔던 부적합한 언론관을 드러냈음. 이는 한마디로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 ·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겠다는 태도임. 결국 윤석열 정부가 후보자를 내세워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권력 감시 사명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음.

- 또 후보자는 “현재 공영방송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현재적 평가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이념 편향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향후 정치적으로 친정부적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후보자가 “현재 공영방송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후보자가 현 공영방송에 대해 심각한 이념적 편향 사고에 빠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후보자가 현 공영방송이 정권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좌편향이라고 직설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후보자는 이미 공영방송에 대해 편파적 시각을 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 의식까지 잠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아울러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 질문에서 후보자는 “방만 경영, 부실 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제대로 된 경영, 방송 윤리, 정파적인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다”라고 답변. 이 또한 공영방송의 경영, 보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 후보자는 “편향된 뉴스가 많기 때문에 국제 보도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 외에는 (지상파는) 잘 안 본다.”라고 답변함. 이 말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태도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임. 후보자의 말은 결국 자신의 관점에서 동의되지 않는 지상파방송 보도는 편향된 뉴스로 낙인찍어 외면한다는 의미로, 지상파방송 정책을 주무(主務)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자세임
- 후보자는 TV조선 재승인 건과 관련한 질문 중에 “특정 종편(TV조선)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은 중대 범죄 행위다”라고 답변함. 후보자의 답변은 사법부의 유죄 확

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검찰의 태도와 같이 기소만으로 무조건 유죄로 인정하려는 편향·왜곡된 사고의 보유자임을 보여 주는 답변이라 할 것임. 이러한 편협하고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전달 기능을 갖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담보할 수 없을 것임.

- 후보자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라며 “민영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 공영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방송사들은)는 정보시장 유통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옳바르다”라고 답변함. 후보자는 해외 주요국이 공영방송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이 답변은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음. 공영방송 민영화의 목적은 오로지 정권이 조종하기에 편한 민영방송으로 만들어 정권의 꼭두각시 방송으로 재설정하려는 것임. 따라서 오로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유물로 간주하고 정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의 소유자인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임.

- ‘유럽에선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디지털

시장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도 실정에 맞는 법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 하며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 전달하고 있다”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함. 또한 인사청문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함

후보자의 답변과 발언은 한마디로 정권에 불리한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들을 압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것임. 후보자는 포털이 가짜뉴스 전달체인 양 가장하여 통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 통제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상,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로 결코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가 더욱 명확해진 것임.

-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책임질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인사로 판명되었음.

○ 증여세 탈루 의혹

그동안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장녀와 차녀는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만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음.

또한, 부부간 증여세 면제 기간 10년간('10.2월~'20.1월) 배우자 명의 납입 보험료 3억 6,6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질의하자 후보자는 배우자 자산으로 납입했다고 답변. 그러나 배우자의 자산 증식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면 그때 증여세 내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함.

○ 부인 인사청탁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부인이 2010년 1월 중순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2,000만 원을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전달자는 청탁 두 달 후에 받았다고 밝힘. 금품 전달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G20 정상회의 홍보기획단장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이는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함. 또한, 후보자는 민정수석실에 돈을 즉시 돌려주면서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 해명과 달리 대통령기록관에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기록이 없음.

○ 동아일보 입사 과정에서 군복무기본법 위반 및 응시자격 위반에 따른 부정채용 정황

후보자는 1985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일보 수습기자 모집 지원, 합격, 근무하였음. 당시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자격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가능하였는데, 후보자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응시자격이 없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지원·합격하여 부정 채용된 정황이 있음. 아울러, 부대 기록 자료상 공식 휴가나 외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을 치르고, 만기 전역 전에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현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부기본법을 위반한 것임.

○ 기타 추가적인 부적격 사유

• 답변 반복과 허위 진술

또한, 청문회 이전 진행된 서면질의 답변을 청문회 당일에는 반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답변 태도를 보이며 위증을 의심케 하는 여러 답변하였음. 후보자의 과거 발언 ‘보수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에 대한 현재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지금도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후보자의 보수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 전략’을 묻는 서면질의에 “정당과 시민단체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음. 그러나 청문회장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18년 평등의 역습을 쓰면서 작성한 것이고, 위원장 되면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반복하였음.

또한, <조선일보 문제보도> 문건 관련하여 후보자는 ‘문제 보도로 지칭하고 관리한 이유 및 조치내용’을 묻는 서면질의에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한 반면, 청문회장에서는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고, 지시했다거나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쓴 게 아니며 내용을 보니 통상적인 모니터링 수준일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모니터링 취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서면 답변과 달리 청문회장에서는 작성 취지를 추측한 것이라며 답변을 번복함.

후보자의 배우자가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아들의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황당무계한 얘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부인하였음. 그러나 당시 담임교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기록부 수정요구는 사실이며 사과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배우자님은 생기부와 관련해서 전화를 한 부분은 제 인생에, 기억 속에 팩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검사가 (생기부를) 떼어보면 알 것”이라고 증언하여 후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됨

또 후보자는 1학년 담임선생님이 이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에게 “그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해 밀어붙였다”라며 “정말 미안하게 됐다”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전화가 온 시기는 아들이 대학교에 진학한 2014년 직후이고, 이 후보자는 오늘(인

사청문회일) 아침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당시 담임교사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담임선생님이 배우자의 아이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은 학폭과 관련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냐’라고 질문하자, 담임교사는 “아니죠. 제가 왜 학폭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요”라고 답변하여 후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됨.

홍보수석실 내에 국정원 파견 행정관을 기억하냐는 질의에는 “기억하지 못한다.”, “황 누구라는 사람의 존재를 그때는 진짜 몰랐다. 최근에 그런 사람이 와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과거 홍보수석을 지낸 위원이 청와대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에서 파견관을 받기 위해서는 수석이 동의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더라도 불과 4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직원 중 외부에서 파견받은 직원의 존재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를 통해 후보자의 답변은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됨.

- 불성실하고 불손한 답변 태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므로 사퇴할 의사를 묻는 위원 질의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위원 질의에 “결혼할 때부터 부부 돈을 당신 돈은 당신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입법하세요”라며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임.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의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안배 대신 법 규정대로 하자는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가능하면’이라고 답변하며 ‘왜 앞선 정부에서 못했냐’라고 되묻는 태도를 보임.

또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나와바리’라는 부적합한 단어를 사용하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마저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청문을 받는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나 답변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고 불손한 자로서 이 또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음.